

주인 바뀐 코웨이, 노조로 몸살... 무슨 일이

‘직접고용’ 큰 틀 합의해 놓고... ‘연차’ 등 디테일 발목

코웨이 임단협 ‘강대강’ 대치

사측 “핵심 근로조건 이미 합의
협상안 노조서 일방적 파기했다”

노조 “노조 무력화 위한 인력양성
사측행동 ‘불법’ 판단하고 있다”

코웨이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을 놓고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특히 코웨이의 주인이 웅진그룹에서 넷마블로 바뀌는 과정에서 불거진 CS닥터 노조와의 줄다리기가 갈수록 팽팽해지면서 향후 코웨이내 또다른 코디·코닥 노조, CL노조와의 임단협도 험로가 예상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의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에는 코웨이의 경우 CS닥터 1500여명, 코디·코닥 3500여명, 그리고 팀장·지국장 등 관리자급(CL) 700여명 등 3개 노조에 걸쳐 총 6000여명의 조합원이 소속돼 있다.

가전통신서비스노조에는 코웨이 3개 지부 외에도 SK매직서비스지부, 청호나이스지부가 소속돼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웨이 CS닥터노조는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을 불



서울 중구에 있는 코웨이 본사.

법으로 간주해 지난 3일 서울지방법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6일부터는 코웨이 대주주인 서울 구로구 넷마블 본사에서 무기한 집회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코웨이는 노조의 일방적인 임금 합의안 파기와 파업 돌입에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본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가치UP 아카데미’를 통해 제품 설치 및 AS를 담당할 전문가 1500여명을 양성, 비상시를 대비해 고객들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웨이와 제품 설치기사인 CS닥터노조와의 임단협 문제는 지난해 10월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노조가 기존 개인사업자였던 CS닥터의 ▲회사 직접 고용 ▲기본급 인상 ▲근속기간 인정 ▲식대 등 복리후생 제공 등을 주장하며 파업에 들어가면서다.

이 과정에서 기본급(월 기준)을 놓고 사측은 225만원, 노조는 240만원을 각각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측의 팽팽했던 협상은 코웨이가 1542명에 달하는 CS닥터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실마리를 찾았다. 기본급도 노조가 수용할 만한 수준까지 접근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지난 2월 대표교섭에서 CS닥터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근로 계약 체결 시점부터 근로기간 적

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으며 이 원칙에 따라 노사가 업계 최고의 보상 수준으로 임금안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합의했다. 이때가 지난달 10일이었”면서 “그런데 노조가 앞서 상호간 합의한 임금협상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또다시 파업에 돌입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임단협을 놓고 95% 수준까지 도달했던 CS닥터 노조가 재파업에 돌입키로 한 것은 바로 ‘근속 연수에 따른 연차’ 문제다.

노조 관계자는 “근속 연수를 다 인정 해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에 대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근속 연수와 연차는 쌍둥이와 같은 것이다. 일한 기간 만큼의 연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측이 (당초 약속했던) 합의를 틀어버린 것으로, 노조는 끝까지 이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코웨이는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교육을 통해 정수기, 비데 등 제품 설치와 AS가 가능한 ‘제품기술 전문가 집단’ 1500여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300명 정도를 이미 확보했고, 추가로 600명에 대한 추가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전문인력은 평소엔 제품 개발, 품질 관리, 마케팅 등 자신의

‘주전공’에 전념하다가 비상시에 현장에 투입돼 제품 설치 등 ‘부전공’ 업무를 하게 된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하지만 노조는 이에 대해서도 감지 않은 시각을 보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교육을 통해 자체적으로 양성하겠다고 한 숫자 1500여명은 바로 CS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수와 같은 수준”이라며 “노조가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아예 대놓고 대체인력을 양성하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노조는 사측의 이같은 행동을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웨이 사측도 물러설 태세가 아니다. CS노조가 원하는 수준을 모두 들어준 만큼 이젠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코웨이 관계자는 “회사는 노사 상생을 목적으로 렌탈업계에서 유일하게 CS닥터 노조원 1542명의 원청 직고용을 결정했으며 기본급 인상, 호봉제 도입 등 노조측이 요구했던 대부분의 사항을 받아들여 합의를 이끌어왔다”면서 “하지만 CS닥터 노조가 일방적인 말바꾸기를 통해 상생을 외면하고 있어 안타깝다. 회사는 노조 파업에 따른 고객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최태원-정의선, 이번주 전기차배터리 협력 논의

(SK 회장)

(현대차 수석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남 등 정의선, 배터리 3사간 회동 마무리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이르면 이번 주 초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전기차 배터리 관련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로써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지난 5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만남으로 시작된 현대차-배터리 3사간 회동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정 수석부회장은 이번 주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사업장을 방문하기로 하고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초 충남 서산 소재 SK이노베이션 공장에서 만나 배터리 관련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부회장은 지난 5월 이재용 삼성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5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 고위인사 대화’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부회장, 지난 6월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만날 때도 각각 천안 삼성SDI, 오창 LG화학 공장을 직접 방문했다.

SK이노베이션은 내년 초부터 양산되는 현대·기아차의 전용 플랫폼(E-GMP) 기반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한다. 입찰을 거쳐 약 5년간 10조원 규모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주로 기아차 전기차에 SK이노베이션 배터리가 사용돼 왔는데 앞으로는 현대차의 주력 전기차로 영역이 확대되는 것이다.

현대차는 그간 코나·니로 등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 차 모델에서 엔진 등

내연기관을 제거하고 그 공간에 전기모터를 설치해 만들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전기차 전용 모델이 출시된다. 전기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용 플랫폼(E-GMP)을 개발한 것이다. 전기차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전용 배터리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다.

재계에서는 최태원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재벌가 후계자로 어릴 때부터 호형호제하는 사이인 만큼 이번 만남에서 다른 성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기차 배터리 협력 방안과 더불어 새로운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기아차는 2025년까지 총 44종의 친환경차를 선보일 예정이며, 이중 절반이 넘는 23종을 순수 전기차로 출시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m

3차추경예산 35.1조 3개월 내 75% 집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시대 대비를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6일부터 집행된다. 정부는 경제 위기 대응 시기가 중요하다고 판단, 앞으로 3개월 내에 추경 예산의 75%를 집행할 방침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이 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각 부처는 6일부터 집행에 돌입한다.

3차 추경 예산은 정부안에서 2000억원 각인 35조1000억원으로 1차 11조7000억원, 2차 12조2000억원보다 약 3배 많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졌던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훌쩍 뛰어 넘는 규모다.

정부는 앞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안에 75% 이상을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초까지 이번 추경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집행될 전망이다. 이미 1차 추경은 90%가 집행됐고, 2차 추경은 거의 다 소진됐다. 정부는 3차 추경 역시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파악해 빠르게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9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 예산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여기에 4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도 투입한다.

/한용수 기자 hys@

中, 하반기 5% 성장 예상... 日, 수출·소비 등 부진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발표

올해 하반기 중국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이 가장 컸던 상반기의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반면 일본 경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부진이 점차 개선되겠지만 연간으로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중국 및 일본의 경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에 따르면 중국 실물경기는 2분기 들어 생산 정상화로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한은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생산 정상화 및 소비 회복세 등으로 2분기 이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이라며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부진이 완화되는 데다 중국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 정책으로

하반기에는 5%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경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긴급사태선포 등으로 생산과 수출, 소비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크게 부진한 모습이다.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고용상황도 악화됐으며, 물가는 수요둔화와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하락세로 전환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